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11 - 64
----------	---------

발의년월일 : 2011. 8 . .

발 의 자 : 장영숙의원 조남진의원
유동균의원 김순금의원
김수진의원 이필래의원
서종수의원 한일용의원

1. 주 문

- 마포구의회는 우리나라가 과거 일제에 의해 불법적으로 강점당하고 식민지로 굴욕적 삶을 강요당했던 일제시대에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일본군 성노예로서 인권을 유린당했던 여성들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지 않을 수 없음.
- 지난 21년 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국제적 관심을 일으키며 활동해온 피해자들과 민간단체들의 노력을 지지·격려하고, 그 동안 일본정부에게 사죄와 법적 배상,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요구하고 권고했던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유엔인권위원회 여성폭력문제특별보고관의 권고와 게이 벵두걸 유엔인권소위원회 특별보고관의 전시 조직적 강간, 성노예제 및 그와 유사한 관행에 관한 보고서, 이 외에도 수차례에 걸쳐 일본정부에게 법적 책임을 권고했던 유엔 기구들의 결의와 ILO 국제노동기구 기준적용위원회 전문가위원회의 보고서 등을 적극 지지함.
- 미국, 유럽연합, 네덜란드, 캐나다, 대만 등 여러 나라 의회에서 채택된 사죄와 법적 배상, 역사교과서 기록 등을 요구한 결의서와 2008년 10월에 채택된 대한민국 국회에서의 결의를 적극 지지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요구와 국제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일본정부와 일본국회에게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음.
- 마포구의회는 하루속히 일본정부가 국제사회의 권고를 이행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시키기를 대외에 천명함.

2. 제안이유

- 올해는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66주년임과 동시에 우리나라가 일제에 강점당하고 굴욕적인 식민지 삶을 시작한 지 101년이 되며, 과거 식민지의 아픔을 극복하고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운동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작되고 진실이 규명되기 시작한지 21년이 됨.
-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침묵을 깨고 용기 있게 역사의 산 증인으로 나섰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과 유사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관련 단체들과 유엔과 미주,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를 돌며 활동했으며, 1992년 1월 8일부터 19년 동안 매주 수요일마다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개최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수요시위에도 매주 참석하고 있음.
- 피해자들과 민간단체의 노력으로 인해 유엔인권위원회 여성폭력문제 특별보고관은 일본정부에게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 올바른 역사교육 등의 실시를 권고했으며,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적용위원회 전문가 위원회는 일본군 '위안부'는 성노예 제도로서 ILO 제29호, 강제노동금지 조약을 위반한 사례라고 판단하고, 일본정부에게 사죄와 법적 배상을 요구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여전히 공식 사죄와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고, 강제성 부인 등 역사를 거꾸로 끌고 가려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위안부'는 '매춘부'라든지, '돈을 벌기 위해 자원한 여자들', '아시아태평양전쟁이 침략전쟁이 아니라 해방전쟁'이라는 등의 망언이 정치가들 및 사회지도층에서 계속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일본정부는 전혀 제지하지도 않음으로써 제2, 제3의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음. 또한 역사교과서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삭제하여 가르치지 않음으로써 젊은 세대들에게 거짓 역사를 교육하고 있는 현실임.
- 2007년 7월 30일 미국 하원에서는 일본정부에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사죄하라는 결의서를 채택했으며, 네덜란드와 유럽연합 의회, 캐나다 의회에서도 일본정부에게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 올바른 역사 교육 등을 요구하는 결의서를 채택하였고, 2008년에는 대한민국 국회와 대만 국회에서도 일본정부에게 사죄와 법적 배상을 요구하는 결의서를 채택하였음.
- 일본 국내에서도 2008년 3월부터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일본 정부와 국회를 향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성실히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서를 채택하고 있으며, 시민들은 일본정부가 직접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배상하게 하도록 일본국회에서의 입법을 위해 활동하고 있음.
- 한편, 피해자들은 고령이어서 나날이 사망자가 늘고 있음. 최근 2011년 2월 3일 경북 영천의 박분이(91세)씨가 사망하여, 이제 75명이 생존해 있음. 생존해 있는 피해자의 경우에도 고령과 '위안부' 후유증을 안고 있어서 하루빨리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급성이 있음.

- 지난 2011년 8월 4일 경기도 광주시에 소재한 나눔의 집을 방문하여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만나 이들이 겪었던 참상을 생생하게 들었으며, 일본정부의 사과와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병마에 시달리며 어렵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니 분노하지 않을 수 없음.
- 이에 마포구의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사죄와 법적 책임 이행,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요구하는 결의서를 채택하여 일본정부에게 하루 속히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자 함.

3. 보낼 곳

주대한민국 일본 대사관, 외교통상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는 피해자들 및 시민들과 함께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올바르게 해결되어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이 하루속히 회복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겪은 희생과 고통이 후세대에게는 반복되지 않고, 평화와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기억, 교육하는 일에 힘쓸 것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일본정부에게 1930년 전쟁부터 1945년 패전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소녀와 여성들을 연행하여 일본군 성노예로 만든 비인도적 범죄사실에 대해 공식 인정하고 사죄하며, 역사적이고 법적인 책임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1. 일본정부에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한사람이라도 더 살아있을 때에 사죄와 배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입법적 제도를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1. 일본정부에게 일본군 '위안부'와 같은 유사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일본 역사교과서에 올바르게 기록하고, 현재와 미래 세대들에게 교육할 것을 촉구한다.
1. 일본국회에게 일본군 '위안부'제도에 대한 진실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공식 인정, 법적 배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특별법을 하루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1. 대한민국 정부에게 지난 21년 동안 유엔과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세계를 돌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피해자와 민간단체의 노력을 지원하고, 일본정부가 공식 사죄, 법적 배상 및 올바른 역사교과서 기록을 이행하도록 외교적, 행정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11.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일동